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전기요금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가격제 단계적 도입을 재차 밝혔고,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등으로 구분하는 설계안이 공개된 바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획일적인 권역별 접근이 아닌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다소비 기업들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5개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송전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등의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시·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하고
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

2025. 3. 31.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